

금남로에서



채희중  
논설위원

‘1 : 7 = 100 : 43’. 수학적으로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앞의 1대 7은 광주 인구와 서울 인구의 비례이며 뒤의 100대 43은 광주와 서울의 한방병원 수를 나타낸다.

현재 광주 지역 한방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을 보여 주는 기형적인 비례식이다. 다시 말하면 광주 인구는 서울의 7분의 1 수준이지만 한방병원 수는 서울보다 2.3배 이상 많고, 인구대비로 보면 16배나 앞선다. 병원 개수만 놓고 말한다면 가히 광주를 한방병원의 메카(?)로 불러야 할 판이다.

2017년 5월 현재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한방병원은 299개다. 이중 광주의 한방병원은 무려 100개로 전국의 33.4%를 차지한다. 광주에 비해 인구가 월등히 많은 서울(43개)·부산(10개)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방병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환자

광주, ‘사무장 병원의 도시’ 오명 씻으려면

유치 경쟁을 부채질해 보험 사기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초래했다. 인구가 많은 것도, 특별히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 도시에 한방병원이 넘치다 보니 타 지역 의료계에서는 광주를 ‘한방병원의 도시’ ‘사무장병원의 도시’라는 말로 비꼬기 일쑤다. 한방병원이 너무 많다 보면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만 늘게 되고, 과잉진료로 인해 오히려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한방병원 난립과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나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없이 적은 비용으로 개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 병원은 대생의 목적이 투자금 회수와 개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부실 진료,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입원료와 인구 대비 보장성보험 10개 이상 가입률도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에 한방병원 두 곳을 운영하며 4년간 요양급여와 보험금 139억 원을 부당 수

령한 사무장병원 운영자들과 한의사가 최근 적발됐다. 이들 병원과 짜고 일·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인당 30만~10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 5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의료재단 이사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특히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병원으로부터 접대와 병원 매점 운영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광주에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타 지역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타 대도시에 비해 저렴해 병원 건물 구입이 쉽고, 빌딩 공실률도 높아 임대료도 싸다는 것이다.

부당 이익은 모두 몰수해야

더욱이 병원이 많아 경영에 실패했거나 개업을 못한 의사들이 다수여서 명의를 빌리기 쉬운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년여 전 사무장병원을 차렸던 1세대 사무장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데다, 이들 사무장 밑에서 일했던 일반 직원들도 노하우를 익혀 사무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의 개업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은 한 번 단속을 당하면 폐업 신고를 한 뒤, 의료 기록을 모두 폐기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또한 사무장 병원의 정보·로비력이 각계에 미치고 있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단속이 나가면 상당수 사무장 병원들이 대비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퇴직 경찰이나 의료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사무장들과 동업을 하는 병원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보험 사기 적결을 위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에 사무장 병원만을 수사하는 상설기구(전담수사팀)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의사·한의사·심평원·손해보험협회 등이 힘을 모으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나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 현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 부당이익을 모두 몰수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자격을 정지시켜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chaekw@kwangju.co.kr

社說

5·18 특별법 발의…진상규명 마지막 기회다

5·18 민주화운동의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공동발의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 폭력, 학살, 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진상 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이다.

진상규명 조사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을 비롯한 인권 침해 부당이익을 모두 몰수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자격을 정지시켜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chaekw@kwangju.co.kr

단 발표 책임자 및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집단학살사·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조사 등이다. 한마디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5·18 당시 시민들에 대한 집단 발표 책임자 및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그동안 미진했던 5·18 진상규명의 완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5·18 진상 규명 약속 이행 등 정부와 여당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이 5·18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기 좋다 윤 시장의 무안공항 활성화 노력

윤성현 광주 시장이 최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 무안공항 정기 항공노선을 제안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 지사가 할 법한 일을 광주 시장이 추켜 든 것인데, 윤 시장은 “시·도 상생을 위한 것은 무안공항 활성화가 우선이고, 무안공항 활성화의 혜택은 곧바로 광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먼저 지난 7~9일 일본 기타큐슈를 방문해 기타하시 켄지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무안~기타큐슈’ 정기노선 운항을 논의하면서 현재 주 1회 운항하는 전세기를 오는 10월부터 주 3회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또 내년 1월께 양 지역 항공정기편을 운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뉴클립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런펑평 광저우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지매결연 도시끼리 항공 노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신설 노선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광저우가 자매결연을 한 지 20년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경·심양·상해처럼 정기노선 개설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런펑평 광저우 당서기는 담당 국장을 불러 ‘알아보라’고 지시한 데 이어, ‘광저우의 밤’ 행사에서 항공사 사장에게 윤 시장을 직접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후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노선 개설을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 낸 상태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광주·전남 발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 실천이 없었을 따름이다. 윤 시장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광주·전남 상생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은편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고등학생 딸아이는 물론 초등학생 아이도 화장을 한다. 엄마처럼 하지는 않지만 옅은 화장을 하는 것이다. “안 해도 이쁘데” 하면 “하면 더 이쁘”라고 대답한다. 하긴 좀 이쁘기는 하디마는... 이들의 반 친구들도 대부분 화장을 한다고 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을까? 화장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스페인 남부 무르시아(Murcia) 지방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에서 영국 브리스톨대 조양 질량(Joao Zilhao) 교수 연구팀이 찾아낸 노란 색소와 검은색 광물이 섞인 붉은 색 가루이다.

이는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화장을 했다는 증거이다. 화장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7500년 전 이집트의 고대 무덤 벽화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치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눈과 입 그리고 피부를 질병으로부터 보

청소년 화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호하기 위함이었다 한다. 화장이 주술과 치료의 목적이 아닌 본격적인 미의 도구로 쓰인 것은 기원전 70년경,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때부터였다. 이후의 역사에서 화장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중국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화장을 하였고 특히 손톱의 색으로 계급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화장에 대한 역사는 고조선 시대 만주 지방에서 돼지기름을 발라 추위를 이기고 동상을 예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시대 고분 벽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신분과 계급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조선 시대 유교적 도덕관념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상으로 한때 화장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화장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산업화의 기록이 있으며 조선 말기 명성황후는 러시아 화장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박가분’(朴家粉)으로 1915년 처음 만들어지고 1918년 최초의 화장품으로 등록되었다. 역사가 어찌 됐든 청소년이 아이들에게 화장을 권장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주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청소년이 너무 일찍 화장을 시작하면 피부가 상할 수 있다.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은 각종 화학성분과 환경호르몬 등의 유

해물질로 성조숙증이나 유방암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이다. 여자라면 모름지기 ‘화장’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외모 지상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이유도 있다.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 욕구이며 화장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보다는 민감한 청소년 시기의 ‘문화’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도 있다.

2013년 대한화장품학회지 발표를 보면 중·고등학생 1092명 가운데 52.2%가 색조화장을 하고 있고, 이중 43.2%가 초등 학교 때 화장을 시작했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반 이상이 화장을 한다.

이쯤 되면 뭐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월에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 책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간하여 전국의 초·중·고에 배포했다.

‘예쁘게’가 아니라 ‘안전하게’에 초점을 맞춘 책자다. 씻지 않은 손으로 크림을 덜어내선 안 되고, 눈과 입술에 쓰는 화장품은 친구와 같이 써서는 안 된다. 퍼프나 아이세도팁 같은 화장 도구들은 중성세제로 세척해 완전히 말린 뒤에 써야 한다. 색상이나 냄새가 변하거나 물과 기름이 섞이면 화장품은 미련 없이 버리고, 립스틱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세균과 잘 들

착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에는 지우는 게 좋다. 등이 책에 포함되었다.

어른은 항상 사회의 주류집단이었고 청소년은 항상 비주류 집단이었다. 주류 집단의 문화가 옳다는 것이 강요되기 때문에 주류 집단의 문화에 대한 비주류 집단의 모방은 강렬하며, 상대적으로 비주류 집단 문화의 단점만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장을 주류집단만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화장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추다. 그러나 화장에 대한 모방 또한 강렬하여 중·고생 반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다.

화장이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한 개인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나를 사회 속 타인에게 보여 주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를 ‘독립된 시기’인 청소년기의 ‘독특한’ 문화로 ‘인정’한다면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예쁘게’ 화장할 수 있는 화장을 제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특히 동년배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하는 화장품 말고 유해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이 없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대의 요구라 생각한다.

낙서가 있는 후술근한 학교 체육복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면서 ‘눅눅’ 자서 화장을 하나도 못 했다’고 푸념하는 중학생 여자가이가 계속 눈에 어른거린다.

기 고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

주권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주권국의 국민이 외국의 책임을 묻거나 외국의 정책이 자국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작업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주권국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거나, 그 관계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국의 제도와 정책이 특정국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비대칭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 비대칭적 관계가 자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미친 영향을 따져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라 하겠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정치적 비극인 광주 학살이 미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이 전 대미문의 국가 폭력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되어 있으며, 그 개입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믿고

1980년 광주 항쟁과 미국 책임론

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 학살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미국의 개입과 관련된 가장 유력한 주장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력 동원에 의한 광주 학살을 묵인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들과 진상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국가 폭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공동체적 투쟁을 극단적 불순분자들의 폭동으로 폄하하였으며, 냉전체제 하 안보 논리를 앞세워서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개입론에 대한 실증 분석과 가치 판단은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대의 한미관계를 둘러싼 복잡미묘한 역학관계와 주권을 가진 국가 간에 오고 간 외교적, 군사적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미국이 광주 학살에 미친 영향력의 본질이 제대로 파악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영향력

이 절대적, 일방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12·12사태 직후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해서 본국에 보낸 정세분석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스스로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경제원조를 담보 삼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던 60년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한정권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질적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신군부와 정치세력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실질적 영향력을 보여 주지 못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형식적 항쟁권력으로서 최규하 정부와 실질적 권력집단인 전두환 신군부로 이원화된 한국의 정치권력구조 환경에서 미국은 한국의 정치 발전과 인권 신장을 강제할 외교적 압박 조치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외교적으로 패권국이었지만, 위성국 한국에 대한 그 전략적 영향력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당시의 한미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양국을 둘러싼 거시적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란 미국대사관의 인질 사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의한 신냉전의 전개, 중남미의 사회주의 혁명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반미주의 등

은 미국의 대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카터와 박정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대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 정세에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광주항쟁을 계기로 한국이 이란 사태의 재판을 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였다. 광주항쟁 기간 중 군사력 투입을 미국이 승인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선전 방송을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한 것도 반미주의가 물고 을 파급 효과를 이라고 중남미 등지에서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의 인권과 정치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패권 유지라는 두 개의 전략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후자를 택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두환 신군부를 지원하여 광주에서 수천 명의 희생을 초래하였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크게 후퇴하였다. 미국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광주 학살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게 묻는 제국주의론적 시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게 각각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에 형성된 외교, 정치, 군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주권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국내적 사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그 주체인 자국민과 그 정부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無 等 鼓**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 중한 명으로 꼽히는 노자(老子)의 도덕경에는 ‘동선시(動善時)’라는 말이 나온다. 행동을 할 때는 때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에 자주 쓰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표현에 해당될 것이다. 알맞은 때를 봐서 움직여야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적의 타이밍’은 주식 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가능한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만 최상의 수익

미’(anomie, 혼돈) 상태이기 때문이다. 급박하게 다투야 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7월 임시국회도 여야 대립은 물론 일부 야당이 국회 의사당전 참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타이밍’이라는 표현에 해당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5개월가량 국정 공백이 이어졌던 만큼 무엇보다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때인데도 말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재보 조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할 수 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정싸움을 벌

**최적의 타이밍**

이면서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정 안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수개월 동안 광주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의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이 차디찬 아스팔트에 앉아 만들어 낸 ‘촛불 혁명’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늦었지만 여야가 국회와 정치를 다시 살려낸 최적의 타이밍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

최적의 타이밍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정치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아노

**光 州 日 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8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